

2005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여러분의 것! <두번째>

# 학생 자치 실태 조사 보고서



두발자유를 허(許)하라!

▲S공고의 종이비행기 사건-두발자유 염원을 담아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청소년위원회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여러분의 것! <두번째>

# 학생 자치 실태 조사 보고서



두발자유를 허(許)하라!

▲S공고의 종이비행기 사건-두발자유 염원을 담아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청소년위원회

■ 보고서를 내면서 1.

##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자치 관련 국정감사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민주노동당에 국정감사는 계속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거연령이 만19세로 내려갔고 광화문의 촛불시위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던 두발훼손 폭력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학생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이라는 화두를 잡고 다양한 고민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학생생활 규정이 많은 학교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장관이 청소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초 학생폭력 문제로 경찰이 앞장서서 학생폭력단체를 소탕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은 이를 반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CCTV카메라)도 아니고 경찰의 학내 진출도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범죄 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권보장과 인권의식교육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실현되지 않는 이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되면 학생자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비참한 수준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동료학생에 의한 폭력사망사건, 전북지역의 급식불만 학생 퇴학사건,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에게 독극물을 먹인 사건 등은 우리 주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저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10월 26일

##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장 구정인

###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대형사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규정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입시와 청소년에 대한 억압적 사회구조라고 생각해 보았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은 모두 입시라는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다. 청소년들의 의식이 입시압박에서 단 1시간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어리다'는 인식으로 불안한 시선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사고 치거나 사고 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묶여있다.

이런 청소년들이 그 입시 때문에 들고 일어났고 어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입시 때문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더니 급기야 학교 안에서도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교내시위도 하는 것이다.

### 청소년 그들이 주인이다.

이번 입시시위와 두발시위에의 주동자는 특별한 소수가 아닌 바로 대다수 일반적 청소년이었다. 청소년들은 처음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촛불을 들고 여론을 모았다. 모 단체의 추모제를 빌어 집결하자라는 문자를 대규모로 확산시킨 것도 청소년들이다. 한반에 2/3이상이 문자를 받았고 한명이 10번 가까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였다. 이날 광화문에 얼마나 어떻게 모일지 어떤 구호가 등장할지 주최 측도, 경찰도, 교육당국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 촛불세대의 반란

두발문제, 입시문제에 반발한 학생들은 제일 먼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캠페인, 학내 락카시위, 종이비행기 시위, 교내집회, 촛불집회까지 다양한 방법의 시위를 익숙하게 조직해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응원은 학생들에게 광장문화를 익숙하게 만들었고,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의 경험은 불의에 항의할 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작년 강의석군의 1인 시위와 단식은 학교에서 학생도 자기문제로 항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학생들에게는 '학습과정' 이 되지 않았나 싶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한다.**

청소년들에게 시키는 데로만 해야 한다는 금기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자포자기의 무기력 중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스스로 만들어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권리를 획득해 가는지 눈여겨 지켜볼 일이다. 이번 경험으로 학생들은 자기문제를 들고 언제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정작 정치권이나 교육기관이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예감 때문이다. 억눌리고 주눅 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고무하며 신명나는 자기주장의 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면 된다. 듣고 소통하고 개선하면 된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며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이 자료집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과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고 진단하려는 노력이 청소년들의 자치활동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차 례

## 인사말

### □ 학생자치 관련 자료 분석

#### I. 자료 조사 및 분석 개요 - 5쪽

#### II. 자료조사 분석 결과 - 6쪽

#### ◇ 분석결과 관련 교사, 학생의 생각 -9쪽

#### III. 조사분석 통계 - 13쪽

1. 학생 자치활동비 예산 관련
2. 학생회 권한 관련
3. 학생회 및 동아리 공간 관련
4. 학급회장 선출관련
5. 학생지도위원회 관련
6. 2005년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관련
7. 학생의 홈페이지 이용, 학생의날 관련

### □ 참고자료 - 학생인권 실태 관련

- [1] 반인권적 두발규제 사례와 청소년들의 두발규정 개정운동 - 28쪽
- [2] 경쟁적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외침 - 40쪽
- [3] 청소년의 실 권리 -42쪽
- [4] 청소년의 막혀있는 표현의 자유 -51쪽



# 학생 자치 및 학생 인권 관련 자료 분석

## I. 자료 조사 및 분석 개요

### 1. 조사방법 및 조사 내용

2005년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였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를, 중학교는 20개의 학교를 표본삼아 자료를 받아 다음의 표와 같이 고등학교 866개교, 중학교 82개교, 총 948개교의 상황을 집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 급별 구분	학교 수	
서울	고등학교	292
	중학교	22
대전	고등학교	56
경기	고등학교	334
	중학교	20
대구	고등학교	85
	중학교	20
전북	고등학교	99
	중학교	20
합계	948	

조사 내용은 학생자치 활동비 예산, 학생회 권한, 학생회 및 동아리 관련 공간 이용, 학생회장 선출, 학생지도위원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학교홈페이지, 학생의 날 행사 관련 하여 총 7개주제로 28개 항목의 조사를 하였으며 가능하면 현황을 통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형식을 취하였다.

### 2. 조사의 한계

이런 유형의 조사를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교육청별 집계시 무응답한 학교가 교육청 별로 몇 개학교씩 있었으며 학생생활 규정의 경우 개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유무의 확인 만으로 정확한 실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항들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자치현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통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선작업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 3. 향후 과제

이번 조사 결과로 학생자치보장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얼마나 말뿐인 정책인지 확인하였다. 더욱 세밀한 조사방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이른 시일내에 학생자치가 자연스럽게 향유되는 학교현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 II. 학생자치 자료 분석 결과

### 1. 학생 자치활동 예산이 평균 1000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절반

- 현재 학교회계상 학생복지비 항목에 학생자치회비라는 세목으로 자치활동 예산이 책정됨.
- 조사대상 전체학교의 49.6%의 학교가 1천만원이 안되는 학생자치활동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학생자치 예산의 40%이상을 축제예산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절반이 넘음. (50.5%)

### 2. 학운위에 참가를 못하는 학생회

- 전체 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의 참가가 안된다고 답했음.
-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1회 이상 참여한 학교는 22.2%로 나타남. 즉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석조차 배제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학생회 명의의 예산 및 규정개정 관련 의견을 학운위에 제출이 불가능한 학교가 40.3%임. 의견제시조차 차단된 상태임. 학생회 대표와 학교측간이 공식협의 틀이 있다고 71.4%가 답했으나 이 또한 형식적인 것임.

### 3. 학생회실에 컴퓨터가 한대도 없다

- 열학교중 두개이상인 학교에 학생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2.4%) 학생회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 대구의 경우 절반이 넘는 중, 고등학교에 학생회실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948개교중 591개교(62.3%)는 학생회실에 컴퓨터가 1대도 없다고 답했음. 2대이상 있다고 답한 학교는 8.6%에 불과함.
- 또한 학생동아리 수가 20개 미만인 학교가 6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됨. 동아리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 4. 학생회장 선거 학교의 예산 지원 안해

- 아직도 간접선거로 학생회장을 뽑는 학교가 있음.(6%) 경기 중학교와 대전 고등학교 경우 간접선거를 통한 선출이 많은 것은 특이한 사례임.
- 학생회장 선출시기는 7-9월이 33%, 4-6월이 21%로 학교운영과는 무관하게 잡혀있음. 이로 인해 학생회 사업계획에 차질이 많음. 연말이나 학기초에 학생회대표 선거가 이뤄지고 학생회 임원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회대표에 자격제한을 과다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적(16%), 품행(13%), 징계유무(41%)의 제한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음. 아직도 성적이 학생 판단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대표 출마시 담임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도 76.6%나 됨.
- 특히 학생회장 선거운동에 학교의 예산지원이 없는 학교가 69.9%에 달해 학생 개인비용을 들여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은 학생자치가 얼마나 학교에서 무시되고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 최소한의 후보 홍보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것임.

### 5. 학생회 자치를 과다하게 개입하는 지도위원회

- 전체의 약 79%의 학교에 학생지도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 학생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문해야 할 교사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음.
- 학생지도위원회가 학생회 대대 소집 승인권(35.7%), 학생회 예산 승인권(29.6%), 학생대표 후보자격 박탈권(35.2%)을 가지고 있음. 특히 경기를 제외한 서울, 대전, 대구, 전북의 경우 절반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지도위원회가 학생대표에 대한 자격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임.

### 6. 2005년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많이 개정되었는데

- 2005년 8월말 현재 조사 학교중 635개 학교에서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이 되었음이 나타났음. 전체 학교의 약 67%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하지만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견 표출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런데 학생회칙 등의 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 대의원대회(27%), 학생회(19.4%)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답했음. 이런



절차가 형식적이어서는 안됨.

- 규정개정관련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석 및 발언이 있었던 학교가 33.5%인데 다른 조사항목인 올해 학운위 참석횟수에는 훨씬 못미치는 결과(1회이상 참가가 22%)가 나와 통계에 차이가 발생함.
- 규정개정 내용은 두발, 학생생활지도 및 용의복장, 학생회칙이 주를 이뤘음. 아직도 개정되어야 할 학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7. 학생의 날 프로그램 학교계획에 없어

-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자유게시판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하지만 자유게시판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공간이 되기는 힘든 상황임.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학교가 65.2%로 나타남.
- 또 학교 계획상 학생의 날 행사등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51.4%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8. 조사 결과 총평

-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장혹은 지도교사의 의지, 학교의 학생회 운영 전통에 따라 그 활동 내용 및 학교의 지원 편차가 심각함.
-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대표를 뽑아 자신들의 자주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내용과 절차를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학교활동의 하나임. 또한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음.
- 하지만 아직도 학교현장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입시준비와 성적경쟁만을 강요하고 있음.
- 이번 조사결과 학생자치활동 현실이 매우 열악하며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등 법 제도의 정비로 학생자치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청과 학교차원의 다양한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으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 본 보고서 관련 학생, 교사의 생각 1.

### 전 사회적인 요구로 부각되는 학생자치

전누리 (학생,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전 대표)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현장에 있는 학생회 간부들의 학생회 법제화 요구, 그리고 각 언론과 교원노조 및 시민단체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육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점점 학생회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국정감사 자료집인 학생자치에 관한 보고서 역시 전사회적인 요구와 노력을 반영한 결과로 발간되었을 것이다.

#### 보고서의 의미와 한계

이번 당의 보고서는 최초로 학교 안에서의 학생자치현황을 설문조항을 통해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추상적인 현실추론이 아니라 교육청 및 교사 등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 축적된 자료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처음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지적했듯이 유무의 확인만으로 정확한 실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했었다는 점, 또한 교사들의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진실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 한다는 점 등이다.

그것은 현재의 학교 현실에서, 학생자치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엄연히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 한 채,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만을 듣는다면, 실제 사실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도' 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학생자치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은 보고서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학운위 참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자. '참관이 가능하다' 고 한 답변은 근 50%였지만, 대부분의 학생회 간부들은 정작 학운위가 언제 개최되었는지도 잘 모른다. 학운위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학생회 담당교사에게 학운위 참관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학생은 거의 없다 -심지어는 학운위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학생회 간부들도 수도룩하다- 특히 '학운위 참가가능' 에 대한 교사 답변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은 학생들의 학운위 참여횟수 통계에 여실히 나타난다. 근 50%의 학생들이 '한 차례도 없었다' 고 답변한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 다른 현실은 어떻게?

예산관련제안서에 대한 제출가능여부에 52%의 학생회 간부가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생회에서는 매년 부족한 예산으로 고생을 한다. 학칙에는 학생회장이 편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무의미한 조항이 된지 오래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풍문여고 역시 예산권을 빼앗긴지 오래되었다- 또한 '학생대표와 교사간의 공식적인 협의 틀이 있다' 는 응답이 69%씩이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협의틀' 이 간담회 자리처럼 공식적인 것인지, 일방적으로 학생대표가 교무실로 지도교사와 면담을 하는 방식인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자치 현실과 괴리되는 이러한 답변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답변들이었다. 지난 5월 초 학생들의 두발시위에 의해 교육청은 각 학교로 용의복장지도에 대한 공문을 하달했다.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공문이었다. 개정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착실히 교육청의 공문을 따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69%의 학교가 '생활규정을 개정'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보다 더욱 규정이 강화되거나, 생활규정이 아닌 학생회칙이 개정된 학교도 있었다.

또한 여러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설문지 배포는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학급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의원회는 학교장이 참관하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거나 교사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몇몇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이 분출되었을리는 만무하다. -필자가 알아본 결과 몇몇 학교에서는 의사수렴방법에 대해 거짓된 답변을 하는 학교도 존재했었다.

### 학생회 간부들의 좌절

조사결과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학생자치현황이 그나마 많은 부분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도 많은 학생회간부들이 현실제약에 의해,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학교를 바꿔내겠다' 라고 다짐했던 마음을 이어가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학생자치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최순영 의원실과 청소년위원회가 이번 자료집 발간 같은 구체적인 시도를 해주어 학교에 있는 학생으로서 감사하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욱 세밀한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의 현실을 밝혀내주기를 부탁한다.

## ● 본 보고서 관련 학생, 교사의 생각 2.

### 답을 그릇이 없는 음식 - 학생자치활동

이문석 (교사, 수도권 학생생활연구회 회장)

####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 학생자치활동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교육 목표 또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사실 특정교과에 의지하고 있거나 제대로 서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민주시민으로 길러져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호존중과 토론·토의문화, 공동체의 결정과 공동체의 책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고 있다. 군사정권하에서는 사실 민주주의 교육이 반사회적인 교육으로 취급받은 바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의 전수로 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 된다. 공교육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공교육이 사회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 핵심은 민주주의가 결코 지식의 전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가치이며 가치는 삶 속에 체화되는 것으로써 지식의 적용과 실천, 활동과 행동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활동은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은 못되더라도 민주주의의 작동과 체험을 통한 가장 효과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방법 중 하나다.

####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학생자치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하지만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었던 학급회의는 학급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종되었고 학급활동은 다양한 수행평가의 장으로 전락되었다. 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의 중에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은 그 명맥마저 잃어 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비자발적이고 비주체적이어서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릇이 없는데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 기본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학생자치활동의 기본여건을 조성해



주고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라는 매우 민주적인 슬로건을 사용하는 정부가 구성된 지도 3년이 지났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학생자치활동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아이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없는지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렇다면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릇은 무엇일까?

첫째, 충분한 권한의 부여다.

학교의 장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가? 재정권한을 갖고 있는가? 교사와 함께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는가?(학운위 참가권과 발언권) 라는 세 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했다.

둘째, 활동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의원회와 학급회의 개최권한, 학생회 및 동아리 등 자치기구원들이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학생회와 동아리에 대한 지원, 대표선출의 자주성과 민주성 이 모든 항목에서 역시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재정의 보장이다.

학생자치활동의 문화적 총화라 할 수 있는 축제 예산의 보장, 간부수련회·학생의 날 등 행사를 위한 예산의 보장, 학생회와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 이 모든 면에서 역시 부족했다.

###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연초 업무분장을 하면서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학급활동과 계발활동이 포함되지 않듯 학생자치활동의 장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며면서도 마치 비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속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학교의 주체들에서부터 교육부까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는 생각의 전환을 넘어 교육과정 속에 학생자치활동이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앞에서 지적한 최소한의 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운위 참여, 교육복지체제의 구축, 생활교육 과정 등 다양한 경로가 제시되어 있고 실행가능하다. 당장은 생활규정 예시안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추진할 수도 있고, 그 혼한 지침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 일환인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e-러닝, u-러닝, 심지어 영어 공용어 정책까지 수 많은 정책들을 남발하면서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것은 그것이 핵심을 떠나 있는 년센스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자치활동의 그릇을 만드는 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것은 교육부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 Ⅲ. 조사 자료 통계 세부 내용

### 1. 학생 자치활동비 예산 관련

#### 1-1 05년도 학생 자치비 예산액

지역, 급별 구분	1000만 원미만	1000만원~2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	3000만원 이상	무응답 등	합계	
서울	고등학교	122	104	27	21	18	292
	중학교	21	1				22
대전	고등학교	33	15	8			56
경기	고등학교	167	91	34	36	6	334
	중학교		16	3		1	20
대구	고등학교	25	38	10	12		85
	중학교	16	2	1	0	0	20
전북	고등학교	68	18	8	4	1	99
	중학교	18	1		1		20
합계	470	286	91	74	26	948	
비율	49.6%	30.2%	9.6%	7.8%	2.7%	100%	

□ 현재 각 학교의 전체 예산에서 학생자치비예산액으로 책정된 돈은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학교예산에서 평균적으로 약 0.5%정도가 학생자치비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있는 상황이다.

#### 1-2 05년도 축제예산

지역, 급별 구분	0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무응답 등	합계	
서울	고등학교	6	33	97	85	49	22	292
	중학교	0	12	7	2	1		22
대전	고등학교	3	10	29	11	3		56
경기	고등학교	33	75	111	68	40	7	334
	중학교	2	7	10		1		20
대구	고등학교	13	43	18	9	2		85
	중학교	4	1	7	8	0		20
전북	고등학교	6	44	42	5	1	1	99
	중학교		11	6	1		2	20
합계	67	236	327	189	97	32	948	
비율	7.1%	24.9%	34.5%	19.9%	10.2%	3.4%	100%	

□ 각 학교의 축제 예산은 대부분 3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900만원 이상 축제예산을 편성한 학교도 몇몇 학교 있지만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엠프와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공연과



전시회 등을 하려면 실제 축제에 드는 예산은 적지 않다.

### 1-3 학생자치 활동대비 축제 예산 비율(%)

지역, 급별 구분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이상	무응답 등	합계
서울	고등학교	32	67	73	54	44	22	292
	중학교	7	1	8	4	2		22
대전	고등학교	9	12	22	9	4		56
경기	고등학교	86	95	78	41	27	7	334
	중학교	4	7	6	2	1		20
대구	고등학교	16	34	17	10	8		85
	중학교	4	1	7	6	2		20
전북	고등학교	29	27	26	13	4		99
	중학교	5	3	6	3	2	1	20
합계		192	247	243	142	94	30	948
비율		20.3%	26.1%	25.6%	15.0%	9.9%	3.2%	100%

□ 자치활동 대비 축제 예산 비율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 자치활동비중 60%미만으로 축제예산을 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학생회 권한 관련

### 2-1 학운위 참가관련(중복답변)

지역, 급별 구분		참가못함	참관가능	발언가능	합계
서울	고등학교	45	139	135	292
	중학교	3	16	13	22
대전	고등학교	22	26	12	56
경기	고등학교	148	146	92	334
	중학교	6	14	5	20
대구	고등학교	39	43	13	85
	중학교	10	12	3	20
전북	고등학교	58	45	28	99
	중학교	5	6	6	20
합계		336	447	307	948
비율		35.4%	47.2%	32.4%	100%

□ 전체 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47%는 참관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32% 만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 2-2 실제 학운위 참여 횟수

지역, 급별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이상	무응답 등	합계
서울	고등학교	59	56	24	1	4		292
	중학교	16	4	0	2	0		22
대전	고등학교	38	3	3	1	1		56
경기	고등학교	251	29	31	4	4		334
	중학교	17		3				20
대구	고등학교	76	6	2	1			85
	중학교	16	1	2	0	1		20
전북	고등학교	8	8	10	1	2		99
	중학교	14	5	1				20
합계		495	112	76	10	12	0	948
비율		52.2%	11.8%	8.0%	1.1%	1.3%	1.6%	100%

□ 학생들의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위의 2-1의 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948개 학교중 495학교, 즉 52%의 학교가 한번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 시키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많은 학교가 학생의 학교운영위에 참가나 참관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지만 현실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 2-3 학생회 명의 예산 및 규정 관련 제안서 제출 가능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63	98	31	292
	중학교	13	9		22
대전	고등학교	34	22		56
경기	고등학교	167	153	14	334
	중학교	9	11		20
대구	고등학교	40	45		85
	중학교	6	14		20
전북	고등학교	53	23	23	99
	중학교	11	7	2	20
합계		496	382	70	948
비율		52.3%	40.3%	7.4%	100%

□ 전체 학교중에 약 52%인 496개 학교가 학생회 명의 예산 규정 관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는 학생회 명의로 예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현실에서 학생회가 많은 학생회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며, 예산 청구 권한은 형식상으로나마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



으나, 학칙상 지도위원회가 주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4 학생회 대표와 학교측간의 공식협의 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206	56	30	292
	중학교	21	1		22
대전	고등학교	36	12	8	56
경기	고등학교	237	91	6	334
	중학교	16	4		20
대구	고등학교	69	16		85
	중학교	11	9		20
전북	고등학교	69	18	12	99
	중학교	12	5	3	20
합계		677	212	59	948
비율		71.4%	22.4%	6.2%	100%

□ 전체 학교중 677개 학교가 학교측과의 공식협의의 틀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약 전체 71.4% 정도가 학생대표와과 공식적인 협의의 틀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에 전달될 수 있는 기본 통로가 막혀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대표와의 공식적인 협의의 틀이 있다고 답변한 학교의 공식적인 협의의 틀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현실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 3. 학생회 및 동아리 공간 관련

### 3-1 학생회실(공간) 존재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243	31	18	292
	중학교	10	12		22
대전	고등학교	34	22		56
경기	고등학교	250	79	5	334
	중학교	20			20
대구	고등학교	34	50	1	85
	중학교	8	12		20
전북	고등학교	65	27	7	99
	중학교	8	10	2	20
합계		672	243	33	948
비율		71.4%	22.4%	6.2%	100%

□ 학생회실 존재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으로 갈수록, 중학교로 갈수록 학생회실 등 학생회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절반이 넘는 중, 고등학교에 학생회실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학생회실 컴퓨터 대 수

지역, 급별 구분		0대	1대	2대	3대	4대이상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72	96	17	3	3	1	292
	중학교	10	3	3			6	22
대전	고등학교	40	7	2	2	3	2	56
경기	고등학교	205	83	21	4	6	15	334
	중학교	16	4					20
대구	고등학교	65	15	3	0	2		85
	중학교	18	1	1	0	0	0	20
전북	고등학교	51	25	5	3	3	12	99
	중학교	14	3				3	20
합계		591	237	52	12	17	39	948
비율		62.3%	25.0%	5.5%	1.3%	1.8%	4.1%	100.0%

□ 학생회실이 있는 학교 중 약 34%는 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학생회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자재가 부족하다. 학생들이 학생회실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3 전체 학생대비 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지역, 급별 구분		0%~20%	20%~40%	40%~60%	60%~80%	80%~100%	무응답	합계
서울	고등학교	82	108	39	4	32	27	292
	중학교	17	2				3	22
대전	고등학교	26	22	0	1	4	3	56
경기	고등학교	106	104	62	20	36	6	334
	중학교	17	2			1		20
대구	고등학교	22	37	3	0	2	21	85
	중학교	16	3	1	0	0	0	20
전북	고등학교	28	31	10	6	9	15	99
	중학교	15					5	20
합계		329	309	115	31	84	80	948
비율		34.7%	32.6%	12.1%	3.3%	8.9%	8.4%	100%

□ 동아리 참여학생들의 비율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동아리 참여학생 비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 3-4 학생 동아리 수

지역, 급별 구분		20개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무응답	총원
서울	고등학교	168	73	18	5	5	23	292
	중학교	15					7	22
대전	고등학교	42	10	3	1			56
경기	고등학교	206	92	14	5	3	14	334
	중학교	18			1		1	20
대구	고등학교	51	32	2	0	0		85
	중학교	18	1	1	0	0		20
전북	고등학교	56	13	2			28	99
	중학교	17	1				2	20
합계		591	222	40	12	8	75	948
비율		62.3%	23.4%	4.2%	1.3%	0.8%	7.9%	100%

□ 동아리 수는 학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가 아직 20개 이하의 학교가 591개 학교로 전체의 약 62%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동아리수가 5개가 넘지 못하는 학교도 수두룩하다. 또한 현실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을 때 많은 수의 동아리가 있다고 답변한 학교에서는 CA활동과 구분하지 못하지 못하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 4. 학생회장 선출관련

### 4-1 학생회장 선거 방법

지역, 급별 구분		직선	간선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277	14	1	292
	중학교	22			22
대전	고등학교	40	16		56
경기	고등학교	319	4	11	334
	중학교	4	16		20
대구	고등학교	79	6		85
	중학교	20	0		20
전북	고등학교	98	1	0	99
	중학교	20	0		20
합계		879	57	12	948
비율		92.7%	6.0%	1.3%	100%

□ 현재 학교는 모두 직선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아직도 간선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어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 중학교와 대전 고등학교

경우 간접선거를 통한 선출이 많은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 4-2 학생회장 선출시기

지역, 급별 구분		1~3월	4~6월	7월~9월	10월~12월	무응답	총원
서울	고등학교	26	81	97	55	33	292
	중학교	11			11		22
대전	고등학교	23	9	17	7		56
경기	고등학교	12	101	133	76	12	34
	중학교		1	19			20
대구	고등학교	60	3	10	10	2	85
	중학교	20	0	0	0	0	20
전북	고등학교	16	5	39	38	1	99
	중학교	12			8		20
합계		180	200	315	205	48	948
비율		19.0%	21.1%	33.2%	21.6%	5.1%	100%

□ 학생회장의 선출 시기는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학기초나 학기말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말에 선거를 하더라도 학기초부터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때 학생회의 일년나기 활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기초나 학기말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기 중에 선거를 하거나 특히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선거를 하는 경우 당선되자마자 축제를 기획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시기가 2학년 2학기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3학년 초에는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4-3 자격제한 종류 (중복응답)

지역, 급별 구분		성적	품행	신앙	징계유무	출결	벌점	기타	총원
서울	고등학교	63	28	3	128		1		292
	중학교		1		8	1		1	22
대전	고등학교	14	7		20	9		56	56
경기	고등학교	6	29		129	23	2	12	334
	중학교		1		4			2	20
대구	고등학교	29	13		49	6			85
	중학교	9	8		8	4		2	20
전북	고등학교	25	33		36	6		2	99
	중학교	4	4		9	4			20
합계		150	124	3	391	53	3	75	948
비율		15.8%	13.1%	0.3%	41.2%	5.6%	0.3%	7.9%	100%



□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제한의 기준 중 성적과 품행, 신앙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성적이라는 잣대가 학생들을 판단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또한 품행이라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차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소수지만 서울 口, ㅅ, ㄱ고등학교의 경우처럼 신앙의 여부가 학생회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4-4 담임추천 필요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237	37	18	292
	중학교	18	4		22
대전	고등학교	37	19		56
경기	고등학교	250	72	12	334
	중학교	9	11		20
대구	고등학교	61	24		85
	중학교	14	6		20
전북	고등학교	85	5	9	99
	중학교	15	3	2	20
합계		726	181	41	948
비율		76.6%	19.1%	4.3%	100%

□ 전체 약 77%의 학교에서 담임의 추천의 여부가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의 추천이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는 것은 자칫 자유로이 모든 학생들이 출마하는데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 4-5 선거운동 예산 지원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82	191	19	292
	중학교	16	6		22
대전	고등학교	7	48	1	56
경기	고등학교	72	249	13	334
	중학교	4	16		20
대구	고등학교	9	76		85
	중학교	2	18		20
전북	고등학교	22	46	31	99
	중학교	4	13	3	20
합계		218	663	67	948
비율		23.0%	69.9%	7.1%	100%

□ 학생회장 선거과정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교육적인 장이다. 학생들이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가 예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예산을 지원 받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약 23%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거운동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돈을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선거과정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5. 학생지도위원회 관련

#### 5-1 학생지도위원회 존재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230	41	21	292
	중학교	6	16		22
대전	고등학교	46	8	2	56
경기	고등학교	263	63	8	334
	중학교	16	4		20
대구	고등학교	77	8		85
	중학교	20	0	0	20
전북	고등학교	80	13	6	99
	중학교	13	4	3	20
합계		751	157	40	948
비율		79.2%	16.6%	4.2%	100%

□ 전체의 약 79%의 학교에 학생지도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생지도위원회가 존재한다.

#### 5-2 학생지도위원의 수



지역, 급별 구분		1~5	6~10	11~15	16인 이상	전교원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63	85	56	16	6	66	292
	중학교	13	1	2	0		6	22
대전	고등학교	9	28	9	7		3	56
경기	고등학교	37	136	46	31		84	334
	중학교	9	8	2	0		1	20
대구	고등학교	16	37	11	15	6	0	85
	중학교	0	0	0	0		20	20
전북	고등학교	31	39	5	1		23	99
	중학교	9	0	0	1		10	20
합계		187	334	131	71	6	213	948
비율		19.7%	35.2%	13.8%	7.5%	0.6%	22.5%	100.0%

□ 학생지도위원의 수는 1인에서 16인 이상이고 심지어는 전교원인 경우까지 있다. 가장 많은 경우는 6인에서 10인 사이임을 알 수 있다.

### 5-3 학생지도위원회의 대대 소집 승인권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11	136	45	292	
	중학교	4	18		22	
지방	대전	고등학교	22	26	8	56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b>91</b>	<b>235</b>	<b>8</b>	<b>334</b>
		중학교	10	8	2	20
	대구	고등학교	61	24		85
		중학교	15	5	0	20
	전북	고등학교	21	37	41	99
		중학교	3	12	5	20
합계		338	501	109	948	
비율		35.7%	52.8%	11.5%	100%	

□ 학생지도위원회가 대대 소집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 36% 정도이다. 대의원회의의 개최여부와 안건 또한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 의견을 실현되는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 5-4 학생지도위원회의 학생회 예산안 승인권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07	148	37	292
	중학교	3	19		22
대전	고등학교	11	40	5	56
경기	고등학교	80	246	8	334
	중학교	2	16	2	20
대구	고등학교	51	34	0	85
	중학교	5	15	0	20
전북	고등학교	19	41	39	99
	중학교	3	12	5	20
합계		281	571	96	948
비율		29.6%	60.2%	10.1%	100%

□ 학생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기획하기 어렵다. 281개 학교에서는 이러한 예산안 승인권 역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 5-5 학생지도위원회의 학생대표 후보자격 박탈권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11	148	33	292
	중학교	8	14		22
대전	고등학교	25	27	4	56
경기	고등학교	91	235	8	334
	중학교	2	16	2	20
대구	고등학교	51	34		85
	중학교	11	9	0	20
전북	고등학교	28	33	38	99
	중학교	7	8	5	20
합계		334	524	90	948
비율		35.2%	55.3%	9.5%	100%

□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박탈권을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가 334개 학교로 약 35%로 나타났다. 경기를 제외한 서울, 대전, 대구, 전북의 경우 절반가까운 학교에서 학생대표에 대한 자격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눈여겨 볼 대목이다.



## 6. 2005년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관련

### 6-1 2005년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여부 (8월말 현재까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96	71	25	292
	중학교	18	4		22
대전	고등학교	34	19	3	56
경기	고등학교	250	61	23	334
	중학교	19		1	20
대구	고등학교	46	39		85
	중학교	9	11	0	20
전북	고등학교	50	29	20	99
	중학교	13	2	5	20
합계		635	236	77	948
비율		67.0%	24.9%	8.1%	100.0%

□ 전체 학교중 635개 학교에서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이 되었음이 나타났다. 전체 학교의 약 67%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견 표출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 6-2 규정개정 관련 학생의견 수렴 방법(중복응답)

지역, 급별 구분		대의원대회	설문조사	토론	학생회	학급회의	총원
서울	고등학교	96	51	15		24	292
	중학교	8	10	2		4	22
대전	고등학교	28	8	2	5		56
경기	고등학교	80	54	41	80		334
	중학교	9	3	4	3		20
대구	고등학교	21	10	5	50	9	85
	중학교	4	1	2	13	2	20
전북	고등학교	10	4	11	23	2	99
	중학교		1	1	10		20
합계		256	142	83	184	41	948
비율		27.0%	15.0%	8.8%	19.4%	4.3%	100%

□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주로 대의원대회, 설문조사, 토론, 학생회를 통해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급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교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대의원대회나 학생회를 불러서 의견을 묻는 정도로 그쳤을 우려가 있다.

### 6-3 규정개정 관련 학운위에 학생대표 참석 및 발언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51	77	64	292
	중학교	17	3	2	22
대전	고등학교	13	31	12	56
경기	고등학교	85	226	23	334
	중학교	4	14	2	20
대구	고등학교	19	66		85
	중학교	6	14	0	20
전북	고등학교	19	43	37	99
	중학교	4	11	5	20
합계		318	485	145	948
비율		33.5%	51.2%	15.3%	100%

□ 학교 운영위에 학생대표가 참석하거나 발언을 한 경우는 318개 학교로 약 3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발언권이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단적으로 나타난 통계이다.

### 6-4 개정내용 요약(중복응답)

지역, 급별 구분		두발규정	생활지도및 용의복장	학생회칙	총원
서울	고등학교	136	39	14	292
	중학교	12	5		22
대전	고등학교	22	7	4	56
경기	고등학교	100	176	51	334
	중학교	12	5	7	20
대구	고등학교	29	29	12	85
	중학교	9	6	2	20
전북	고등학교	34	14	7	99
	중학교	6	5	2	20
합계		360	286	99	948
비율		38.0%	30.2%	10.4%	100.0%

□ 전체 학교중 360개 학교만이 두발규정 개정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약 38% 정도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발규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꾸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 7. 학생의 홈페이지 이용, 학생의날 관련

### 7-1 학교홈페이지 학생자유게시판 존재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270	7	15	292
	중학교	22	0		22
대전	고등학교	53	1	2	56
경기	고등학교	329	5	0	334
	중학교	20			20
대구	고등학교	84	1		85
	중학교	20	0	0	20
전북	고등학교	94	5	0	99
	중학교	20			20
합계		912	19	17	948
비율		96.2%	2.0%	1.8%	100.0%

□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자유게시판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수의 학교가 학교 입학 초기 학생회칙 매뉴얼이나 학생수첩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칙이나 생활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7-2 자유게시판 실명 사용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181	93	18	292
	중학교	20	2		22
대전	고등학교	41	12	3	56
경기	고등학교	191	143	0	334
	중학교	16	4		20
대구	고등학교	66	19		85
	중학교	15	5	0	20
전북	고등학교	70	27	2	99
	중학교	18	0	2	20
합계		618	305	25	948
비율		65.2%	32.2%	2.6%	100.0%

□ 많은 학교의 자유게시판이 실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05개의 학교에서만 실명 없이도 자유로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음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통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교 홈페이지는 학생들이 의견을 개제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을 실명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교육청의 게시판의 경우 실명제로 되고 있어 실명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 의견을 쓴 학생들이 징계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 7-3 학교 계획상 학생의날 행사 여부

지역, 급별 구분		있음	없음	응답무	총원
서울	고등학교	68	206	18	292
	중학교	8	14		22
대전	고등학교	17	38	1	56
경기	고등학교	213	121		334
	중학교	8	12		20
대구	고등학교	45	40		85
	중학교	7	13	0	20
전북	고등학교	43	33	23	99
	중학교	7	10	3	20
합계		416	487	45	948
비율		43.9%	51.4%	4.7%	100.0%

□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학생의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 학생의날 행사를 하는 곳은 417개 학교로 절반을 못미치고 있다.



## ■ 참고자료-학생인권의 현실

### [1] 반인권적 두발규제 사례와 청소년들의 두발규정 개정운동-1

#### 두발 자유 운동, 파란만장한 2005

2005년 새 학기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 학기 두발규제에 맞서 2005년 상반기는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거리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두발 규제 폐지에 대한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 새 학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청소년들의 화두 “두발폐지운동”

아이두넷의 노컷홈페이지, 다음 아고라 섹션을 통해 두발 규제 네티즌 청원 운동이 1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3월 신학기과 동시에 그 첫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교 규정은 지키고 헌법은 위반해도 되나?” 등의 내용으로 네티즌들의 청원은 다음의 아고라 섹션을 폭주시켰다.

두발 폐지 운동이 다시 벌어진 아이두넷의 경우 3월에만 만 2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두발 제한 폐지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으며 운영자 이준행씨는 바이러스와 인터뷰를 통해 '5년 전 온라인 서명보다 더 심각하게 두발규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온라인 행동은 결코 온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산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S공고의 종이비행기 사건-두발자유 염원을 담아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내 투쟁을 통해 두발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흐름 분명해져

“인권의 공동묘지 ㄷ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당의 ㄷ 고등학교는 3월, 교정이 두발 자유의 외침의 락카로 뒤덮이기도 했다. 구령대와 스쿨버스 등에 두발 자유를 원하는 문구들이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학내 투쟁의 시작을 울렸다.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1,2학년 1,000여명의 서명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두발규제의 문제점과 다른 학교의 사례 등을 조사해 각 반의 게시판에 붙이고 학부모 동의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 또한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추진해오던 학생은 결국 학생부 교사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으며 일부 교사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등 힘든 과정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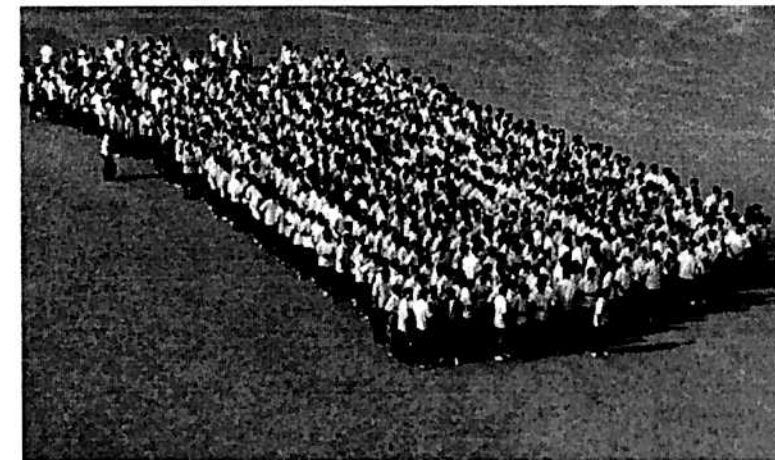
이러한 서명운동은 지방에서도 이어졌다. 대구 O 학교의 학생회장은 가위로 머리를 잘린 경험이 있는 학생회장과 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두발규정에 관한 건의문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다. 제출된 건의서는 모 대학 법학 교수에게서 황당한 답변을 받는 등 오히려 질타를 받기 일쑤였다. 결국 대답은 “더

이상 두발 이야기를 꺼내면 학칙에 의해 징계를 하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명운동과 건의서 제출을 넘어 전교생이 힘을 모아 두발 자유 운동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5월 들어 서대문구 O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과 19일 서울의 S 공고가 98년 선배들의 두발자유 외침을 따라 또 다시 한 번 일제히 두발규제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운동장으로 날리기도 했다.

약 3, 4분간 동안 학생들은 “두발규제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했고 운동장 바닥에는 학생들의 두발 자유의 염원이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점심시간부터 이러한 뜻을 모아 쉬는 시간 틈틈이 문구를 적어 종이비행기를 접어 교사에게 들킬까 싶어 폐휴지통에 종이비행기를 모아 두었다 한 꺼번에 날린 것이다.

이는 성남 P고의 두발 자유를 위한 교내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일어난 청소년들의 외침이었다. 성남 P고의 경우는 2주전부터 꾸준히 준비한 가운데 대의원회의에서 축제이야기와 더불어 두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이 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성남P고의 운동장 집회, 이 날 학생들은 두발 규제 반대한다는 외쳤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딩동댕동~ 8시 종이 울리자 ‘나가자!’라는 외침과 함께 동시에 운동장으로 나갔다. 학교 출구 두 곳에서 아이들이 정말 개떼처럼 몰려나와 각자 줄을 서고 자리를 잡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침해하는 용의 검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두발 규제 폐지 운동은 결코 온라인에서만 멈추고 또 학내에서 개별적인 싸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씨로 모아져 가고 있었다.

#### 학내 흐름 모아 거리로 쏟아진 청소년들, 세상에 두발 자유를 외치다.

이러한 학내 흐름이 모아지는 가운데 각 학교 학생들이 모여 바이러스와 함께 두발 규제 토론회를 벌이고 이후 ‘두발 자유를 위한 시민단체 운동본부’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가 꾸려지는 등 활발한 전개를 보여줬다.

또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와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학생들이 모여 길거리 캠페인과 기자



회견 등을 가지면서 이 문제는 점점 세상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었다.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는 촛불집회, 캠페인 등을 기획하며 '두발자유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운동본부' 토론회 진행 및 교육부와의 만남 등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오기도 했다.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는 14일 행사를 앞두고 12일 분당 과 서울 10여 곳에서 홍보 게릴라전을 펼쳤다.

드디어 5월 14일, 세상의 중심에서 두발 자유를 외치는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 학기 이후 불타오르던 외침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학생도 인간이다 들어라 우리의 외침을 / ©민중의 소리 한승호기자

아이두와 학생인권네트워크가 진행한 두발자유화를 위한 '노컷 거리 축제'에 이어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514청소년 행동의 날'이 진행되었다.

"학생도 인간이다. 들어라! 우리의 외침을!"란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은 당당히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교육부와 세상에 바라는 요구를 당당히 외쳤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중략)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두발 자유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다져나갔다.

514 청소년 행동의 날은 서울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열기는 일파만파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 청소년들의 두발 자유의 외침, 전국으로 퍼져 세상을 뒤흔들다.

14일 서울에서 진행됨과 동시에 대구에서도 두발자유화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대구 국제보상운동공원 앞에서 "두발제한 폐지/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 거리 축제"를 대구청소년문화아카데미 '우주인'과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가 함께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구공고 1학년 한 남학생은 "예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완화시킨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해졌다."며 "머리 염색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우리들의 인권을 무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내 투쟁이 한창이었던 4월부터 전국적인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남 진주에서 '행동하는 청소년'이라는 청소년단체가 2시간동안 캠페인을 진행되었다. 이는 이미 진주 교육청 앞에서 두발 규제 폐지 1인 시위도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두발 자유의 흐름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벌어진 두발 자유화를 위한 집회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난 8월 6일은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두발 규제와 체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집회를 열었다.

이는 7월 24일 대만 학생들의 교육부 앞의 시위와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해 대만 교육부의 공식적인 완전 두발 자유화의 결정 소식을 듣고 "우리라고 못 할까?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두발규제 폐지를 위해 일어서자"며 전북청소년인권모임은 전주 객사길에서 집회를 열었다.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외침에 교육부 등 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협의하라고 '살짝' 꼬리를 내리기도 했었다. 또 국가인권위에서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상반기 투쟁을 넘어 하반기는 다시 원점인 상태이다. 결국 2학기, 새 학기를 맞아 다시 두발 규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열기로 터져 나온 두발 자유화에 대한 외침은 아직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



[1] 반인권적 두발규제 사례와 청소년들의 두발규정 개정운동-2

두발자유화 이론 <서울미술고 학생회> 두발, 용의복장... 100% 우리 손

"제주도에서도 온다!" 국내 '유일무이' 미술특성화 고등학교

<서울 미술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중등교육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미술만 전문으로 교육하는 곳이다. 전공은 소묘, 디자인, 조소, 동양화, 서양화 다섯가지로 나뉘져있고 학생들은 2학년에 올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 75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서울미술고는 주택가 근처에 아담하게 위치해 있지만,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다양한 미술작품들 덕분에 '미술고'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미술품들을 하나둘 둘러 보면서, 서울미술고를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회 간부와의 만남이 더욱 설렜다.

학생회장, 총무, 서기, 홍보부, 문예부, 환경미화부, 여학생부 등 총 20여명의 간부로 이뤄진 서울미술고 학생회는 전교생의 3/4이 여학생인 만큼 여학생부서도 마련돼 있었다.

"꿈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때, 오히려 학생회 활동이 극복하게 도와줬어요"

지난해 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김현우(19)군은 학생회 활동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고, 자기 자신과 다른 학우들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올해 총무부 차장을 맡게된 1학년 후배 진달래(17)양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욕심이 커 보였다.

"미술고에 오려고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온 학교인 만큼 제 손으로 학교를 잘 이끌어 가고 싶어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됐어요"

김아연(서기, 고2)양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수 있고, 학교일에 더 관심을 갖게되서 좋아요"라고 웃어보였다. 특히 서울미술고는 새학기 때마다 학생회 주최로 '형제,자매 결연

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선후배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의미라고 한다.

최예진(문예부장, 고2)양은 "1,2,3학년이 한 그룹이 돼서 결연을 맺게 되는데,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나중에 전공 작업 하는데도 도움돼요"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서울미술고 학생회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학생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미술고가 유명한 이유는 비단 '미술특성화고'이기 때문은 아니다.

100% 학생들의 의견 반영한 '두발규정'.. "그게 가능해?"

"당근이지, 서울미술고에 있소이다"

김현우(19)군은 두발자유화가 된 이후 한 지식검색 사이트에 올라오는 두발규제 관련 질문에 종종 서울미술고의 사례를 종종 답변으로 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네티즌들은 "구라('거짓말'의 은어)치고있네"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서울미술고는 두발규정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 규정' 전체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손수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경우 기초화장이나 반투명 매니큐어, 반지, 목걸이, 귀고리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두발조항은 '머리끝은 반드시 일자로 자르고 머리 길이가 어깨선을 넘으면 반드시 묶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염색과 파마를 제외한 완전자유화가 이뤄졌다.

남학생의 경우는 '귀는 꼭 노출시켜야 하며, 목을 덮는 머리는 반드시 자른다'라고 두발규정을 대폭 완화해, 길이의 자유화를 이뤘으며 무광택 왁스사용도 가능하다.

남녀 공통으로 해당하는 신발은 고풍택의 화려한 소재가 아니면, 색상과 종류에 상관없이 신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가디건 이외의 후두티를 입어도 무방하다.



이처럼 꿈만같은 서울미술고의 두발규정 개정사례가 구레나룻이 조금 길고, 옆머리가 귀를 덮는다 싶으면 일말의 여지도 없이 머리 한가운데에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대부분의 남학교의 학생들에게 거짓말로 돌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미술고 학생들은 두발자유화를 어떻게 얻어낸 것일까?



### "선생님 몰래 눈치보고, 피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두발에 대한 건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김기훈(고3, 당시 소위원회 위원장)과 김현우군은 학급 간부와 일반 학우들 32여명과 함께 소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생활지도부에 찾아가 두발규정에 대한 개정의사를 표명했고, 이인규 교감선생님께서 "개정안을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소위원회 소속원들은 6월 초 부터 5~6차례 회의를 갖고, 현행 생활규정을 읽으면서 각 조항마다 반대, 동의 절차를 거쳤다. 그렇게 두발, 용의복장 등의 조항을 하나하나 수정해 개정안의 초안이 작성됐고, 이를 각 학급에 배포해 전교생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학교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채택하게 됐다.

이처럼 서울미술고의 두발규정 개정사례는 학교의 문제를 처음으로 학생들이 나서 민주적으로 바꿔냈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이 나서면 꼭 막힌 학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 "남보다 먼저 꿈을 찾았으니, 이제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현재 서울미술고 학생회는 10월 28일에 열린 '예림 미술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멋진 축제를 위해 스폰서도 섭외중이고 '까치마당' 공연도 기획중이다. 또 각 전공에 맞는 작품을 전시해야 하기 때문에 1인 또는 그룹으로 작품제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미술고인들은 행복하기만 하다. 보통 또래 친구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꿈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영무(회장, 고2)군은 "조소과의 경우는 혼자하기 힘든 작업이 많아서요. 공동작업을 하다보면 협동심도 길울 수 있고,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윤준영(환경미화부장, 고2)양도 "미술을 하면서도 내신도 신경써야 하고 수능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기 하지만, 내 작품을 만든다는 보람이 커요"라고 밝혔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도 한걸음 성큼 내딛고, 자신이 처한 현실도 바꿔낼 줄 아는 서울미술고 학생회. 이들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라면 앞으로 '두발규정'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

### [1] 반인권적 두발규제 사례와 청소년들의 두발규정 개정운동-3

#### "두발규정 학교마다 달라도 너무나 달라!" 두발규정 비교체험 극과 극

"우리 학교 두발길이는 1cm 늘었는데 너희학교는 어때?"  
"우리는 거짐 두발 자유화지. 학교에서 머리 잘릴 일도 없는 걸?"

교육부의 지침도 대통령 산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도 각 학교 교장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나보다. 천지차이가 나는 두발규정의 실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해볼까 한다.

#### 동성고 "반별로 차이가 난다면 교실로 방문지도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바뀐게 없는 서울 동성고등학교의 두발 규정. 이 학교는 지난 9월 초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은 모든 학생들에게 뿌려졌으면 그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두발의 길이를 규정 지은 사진과 함께 규정을 어길 시의 처벌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 동성고등학교 두발규정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유인물에는 한 남학생의 뒷모습이 찍혀 있으며 그 모습은 스포츠형태를 띤다. 또한 바로 옆에는 사진과 관련된 첨부내용과 처벌시 절차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먼저 이 두발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선부님의 결재를 받아 2005년 9월 1일부로 개정된 것이다. 또한 두발규정의 모델 사진이 최고로 긴 경우라 명시해 놓았다. 똑같은 규정이므로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반별로 차이가 난다면 교실로 방문지도하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가장 시선을 끄는 대목은 규정에 어긋났을 시의 절차사항. 먼저 경의서 작성, 학부모 소환, 선도위원회 개최, 3일 학교 내 봉사활동, 선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사회봉사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원래 이 학교의 규제는 뒷머리를 1/3이상 바깥 쳐올린 것과 구렛나루는 없어야 하고 앞머리는 5cm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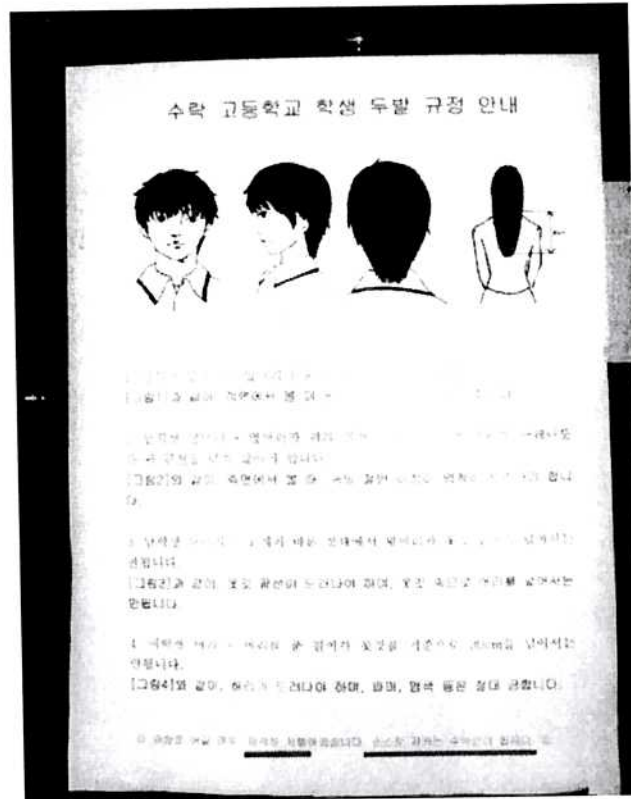


이 규정사항이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규정을 바꾸기 위해 회의를 했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선택했다. 그러나 학운위에서는 학생들과의 토의보다는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나고 결국 결정은 교장신부님에 의해 정해지게 되었으면 바뀐 것은 앞머리가 2cm 늘어난 것과 뒷머리가 가위손질이 가능해진 점이 고작이다.

학생들에 따르면 몇몇 선생님들은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잘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들이 불만사항을 시 교육청에 올리고 있지만 더욱 학교의 두발단속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수락고 "옆머리는 귀를 절반이상을 가리지 말것"

수락고등학교는 두발규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 학교 건물 구석 구석에 배치해 놓았다. 이 학교의 두발규정 정도는 동성고와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자유롭다.



▲ 수락고등학교 두발규정/ ©인터넷뉴스바이러스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을 정도이며 옆머리는 귀의 절반이상을 가리지 않을 정도이면 가능하다. 또한 뒷머리는 옷깃의 끝선을 넘기지 않을 정도까지로 정해 놓았다. 여학생은 머리를 푼 것을 기준으로 옷깃에서 30cm를 넘지 않을 정도이며 파마와 염색을 금하는 것으로 해왔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학운의 회의에 통과시켰으며 그 회의에서 중간적인 결론이 돌출되어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학교는 규제가 있기 전부터 학교에서 심하게 머리를 자른 적이 없으며 바뀐 규정 이후에는 머리를 아예 자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규정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지 못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학교생활규정은 이렇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

### [1] 반인권적 두발규제 사례와 청소년들의 두발규정 개정운동-4

#### 학교에서는 여전히 머리가 잘려나간다 D고 '강제이발'실태 충격! "바리깡? 가위?"

두발규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후, 많은 학교에서 현행 두발규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규제가 행해지고 있고, 심한 경우는 강제이발까지 횡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강제 이발 후

서울에 위치한 D고등학교에 다니는 유민상(가명)군은 지난 9월 20일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생활지도부실로 끌려가 '강제이발'을 당했다.



한 학생의 제보에 따르면, 유 군은 20일 5교시 컴퓨터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1층 컴퓨실로 이동하던 도중, 2층 생활지도부실을 지나다가 생활지도부 담당 조 모 교사에게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

#### "바리깡으로 할래? 가위로 할래?"

조 모 교사는 유 군에게 "바리깡으로 할래? 가위로 할래?"라고 묻더니 바리깡보다는 가위가 낫겠다고 판단한 유 군이 가위로 하겠다고 하자, 구레나룻을 포함한 옆머리와 뒷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렸다.



비록 유 군의 두발상태가 학교 규정에 비해 긴 편이긴 했으나 두발규제 단속에서 걸린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현재 '제한규정을 연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교내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선도를 위해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는다'로 돼있는 D고의 두발규정으로 볼 때, 조 교사의 임의적인 강제이발을 분명히 규정위반 사항이다.

▲ 두발단속에 걸린 D고학생은 가위로 강제이발을 당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그러나 조 교사의 강제이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1일 체육시간에도 10여 명이 넘는 학생의 머리를 '바리깡'(머리 깎는 기구)으로 밀어버린 것이다.

박준호(가명)군에 따르면 "그날 비가 와서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했어요. 두발검사를 한다는 소문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몇 아이들이 구레나룻을 귀 뒤로 넘겨서 감췄죠"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을 눈치챈 조 교사는 교무실에 가서 '바리깡'을 가져 온 후 학생들의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50여 분의 수업시간 동안 대략 10여 명의 학생들이 뒷머리, 앞머리, 구레나룻 할 것 없이 모두 잘랐다.

한편 D고등학교에서는 7월16일 가정통신문에 개정된 두발규정의 내용을 담아 학생,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장은 "근간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규제 및 지도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본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생용의 규정 중 두발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두발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D고등학교의 개정된 두발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변경 안내**

변경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li> <li>- 구레나룻의 길이는 귀의 가운데까지 허용한다.</li> <li>- 옆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 검정색 이외의 염색도 안 된다(단, 특별한 사유로 학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인정)</li> </ul>
변경후	<p><b>제1조 두발규정</b>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제한규정을 두며 이를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제3조의 선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b>제2조 제한규정</b> 약품이나 도구를 이용한 두발 치장은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염색, 탈색,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li> <li>② 브릿지와 스크래치를 허용하지 않는다.</li> <li>③ 무스, 왁스, 젤 등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li> <li>④ 핀, 띠, 모자, 끈 등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li> <li>⑤ 뒷머리의 길이는 와이셔츠의 깃을 완전히 덮지 않는다.</li> <li>⑥ 옆머리의 길이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는다.</li> <li>⑦ 기타 학생답지 못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머리형</li> </ol> <p>(단, 학생의 특기신장이나 신체특성상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위①-⑦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p> <p><b>제3조 선도규정</b> 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학생은 선도를 위해 교내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고 두발에 제한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한규정 제2조 ①-⑦항을 연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교내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한다.</li> <li>②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선도를 위해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는다.</li> </ol> <p>시행시기 : 2005년 8월 26일 개학일부터 적용</p>

이처럼 D고등학교는 최근 두발에 대한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됐지만, 현실에서 적용여부는 불투명해 보였다. 최근에는 아침에 두발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내용은 "두발을 규정에 맞게 단정히 해라"라는 것이지만, 학생들에 따르면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져 다수의 학생들이 강제로 머리를 잘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모 교사의 경우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긴 학생은 경고조치 없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린다고 했다.

이러한 학교의 방침에 대해 D고 학생들은 "두발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구레나룻이랑 뒷머리가 완화되서 좋아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규제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는것 같아요"라고 실망스러워 했다.

강제이발을 당한 이후, D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강제이발 당한 학생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고, "교육부에 올리자", "최근에 두발이 이슈화 됐기 때문에 크게 일으켜 보자"등의 의견이 오고갔지만, '학교'라는 큰 벽앞에서는 막상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개정지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유명무실**

"학생 두발 지도시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 방법은 지양하고, 학생회의 두발 관련 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할 때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 참고 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 5월 10일 발표-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7월 4일 발표-

이로써 교육부의 개정지침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도 대한민국 성역 '학교'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을 시도한 일부 학교들도 학생들의 더 큰 반항을 막기위한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개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셈이다.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구노회 의원은 22일 국정감사해서, 올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재개정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용모복장이나 학생회, 징계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실제로 개정하지 않은 학교가 꽤 많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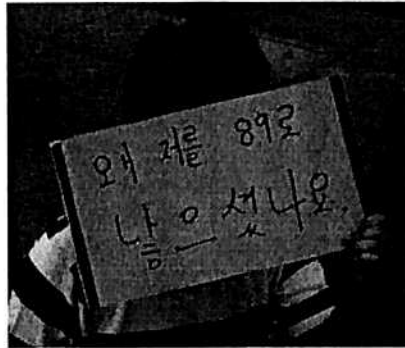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이 문제가 된 지난해와 비교해 불매 올해 학교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는지를 묻는 물음에 164명(57.3%)가 '거의 나아진 게 없다'고 답했으며 '조금 규제가 완화되고 나아졌다'고 답한 학생은 83명(29%)에 불과했다.

이렇듯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있으며, 강압적인 두발규제는 학생들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있다. 2학기,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쟁적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외침

내신 불이익, 징계 극복하고 참여!  
'학벌입시경쟁교육 바꿔라' 외친 5월7일 추모제



▲왜 저를 89로 낮으셨어요 / 바이러스

'입시경쟁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촛불 추모제는 '징계 등 위협을 무릎 쓰고 청소년들이 그동안 그들을 살아왔던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촛불 추모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 운운, 학교 방송 등을 통해 추모제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촛불 추모제가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일 각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추모제 참여를 예방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언론에선 서울시 교육청이 추모제 참가 학생을 징계처리결정을 연일 보도했다. 어떻게 보아도 학생들이 촛불 추모제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징계와 벌점이 내신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내신 불이익 등 위협을 무릎 쓰고 추모제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봉단이 터준 길을 통해 추모제 행사장을 가고 있는 청소년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추모제에 나온 한명 한명의 청소년들은 징계 위협을 극복하고 추모제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교사, 장학사, 경찰들이 조를 이루어 추모제에 참여하기 위해 온 학생들을 둘러보내고 있었다. 전경 차는 추모제 주변을 둘러쌌고 그 주변에 경찰들이 둘러싸고 대열을 움직이며 험악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 조건을 뚫고 추모제에 참여한 한명 한명의 촛불은 그 자체로도 고귀했고, 입시 중심의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얼마나 움아매고 있는지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학벌위주의 입시경쟁교육이라는 우리사회 근본적인 문제제기

둘째, 청소년들이 학벌위주의 입시경쟁교육이라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변혁의 중심에 청소년들이 있었다. 4·19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10

항쟁, 그리고 최근에 미선이·효순이를 위한 촛불집회까지 한국 사회 변화의 시기에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당당히 선 청소년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미선이와 효순이를 위한 촛불집회를 통해 SOFA 등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려 냈다. 2005년 현재 청소년들은 추모제를 통해 우리사회 근본문제인 '학벌위주 입시경쟁교육'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위주의 입시경쟁교육이라는 우리사회 근본적인 문제제기 했던 촛불추모제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입시경쟁 중심의 한국 교육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억압적인 구조로 만들었다.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입시경쟁은 친구를 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삶 자체를 비인간적이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추모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답답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학교 안에서 일방적으로 교사가 내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의 방침에 따르기만 했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본고사 부활, 평준화 해체가 학벌위주 사회 부추긴다는 것 알고 있어

특히 학생들은 입시경쟁 교육 때문에 생기는 학생들의 불만을 본고사 부활, 평준화 해체로 연결시키려는 일부언론과 보수세력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추모제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단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현재 학생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본고사 부활, 평준화 해체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우리 사회를 더욱 학벌위주의 사회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역 교육청 게시판 등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촛불 추모제를 통해 인터넷의 목소리를 현실에서 구체화 시켰다. 이번 촛불 추모제를 계기로 한국사회 교육현실을 폭로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학생들의 반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



[3] 청소년의 월 권리-1

입시와 청소년 건강권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장, 수락중 교사)

1. 들어가며

청소년들의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되어온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초·중·고생 전반에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의 대부분이 거의 온 하루를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야 하고, 널리 그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와 학교폭력·흡연·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이혼 증가, 사이버매체의 발달과 초고속 정보화, 경제적 양극화와 소비문화 확대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에 대해, 슬하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수능이나 본고사나 하는 입시 방식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삶의 주기와 욕구를 존중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재능의 탐색과 발전을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2. 입시와 청소년의 삶

(1) 입시공부와 일그러진 기본 생활주기

▶ '새벽 등교' 및 '한밤중 귀가'<sup>1)</sup>

- 새벽 6시 30분~7시30분부터 '0교시 수업' 실시, 11시 이후까지 야간 자율학습 실시
- 하루 평균 학교에 머무는 시간(학원 제외)이 10시간 56분, 고3 : 12시간 34분, 고2 : 10시간 14분, 고1 : 9시간 59분
- 이에 더하여 학원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 40.4%

▶ 수면 부족<sup>2)</sup>

- 고교생 평균 수면시간 6시간, 고3 학생은 평균 5시간 27분
- 아침에 부모님이 2~3회 깨워야 일어남 42.7%, 꼬집고 때리고 해야 겨우 일어남 7.8%
- (※ 참고)
- 수면학자들의 권장사항 : 적당한 수면 시간으로 초등학생 8~9시간, 중고생 8시간
- 수면 부족은 위궤양(수면 중 인체조직 손상치유 물질 분비 340배), 정서장애, 기억력감퇴, 면역력 저하, 비만과 성인병 등 유발(수면 비용 증가)

1) 2001. 3. 14. 전교조 보건위, 0교시 실태조사 자료, 2001년 실태조사, 수도권·대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56여 개 중 44개 학교(78.5%)가 26개 학교(46.4%)가 밤10시~11시 이후까지 자율학습 및 수업 실시

2) 2001. 9. 전교조보건위, 학생건강 실태조사

▶ 불규칙한 식사<sup>3)</sup>

- 아침식사를 전혀 안하는 고등학생 25.1%, 4명 중 1명 정도가 식사를 하지 않음
- 식사 소요시간은 10~20분 정도, 학원에 가는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강의와 강의사이 쉬는 시간 10분
- 식사 장소는 주로 편의점이나 분식집, 기타 패스트 푸드점
- (※ 참고)
- 장시간 긴장 상태, 운동 없이 앉아 있기, 섬유소 부족 등 영양 균형이 부족한 식사,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위장의 균형을 깨고 정상적인 '장 운동'에 지장을 초래함.

(2) 억눌리는 욕구와 발달

▶ 가장 큰 고민-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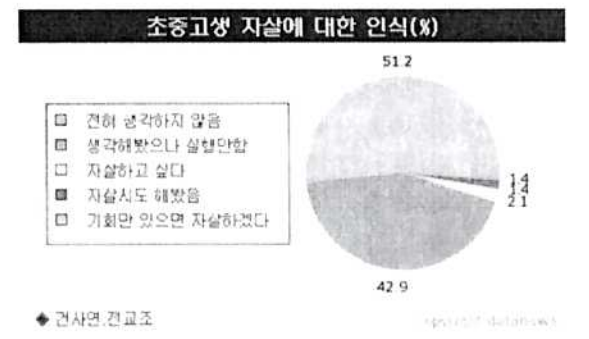
- 초·중고 할 것 없이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성적
- ※ 3,311명 초등학생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sup>4)</sup>, 가장 큰 고민거리 : '공부 및 성적' 71%, '이성문제'(12%), '친구문제'(11%), '부모님과 갈등'(7%) 등.
- ※ 중고생의 가장 큰 고민 : 성적 74.8%, 진로(8.8%), 돈(5.0%), 이성(3.8%), 외모(2.1%), 가족(1.7%), 친구(1.6%) 등

▶ 시험(공부) 공부와 스트레스

- 시험기간에 나타나는 증상 : 불안·짜증 61.2%, 소화불량 37.8%, 두통 35.4%, 복통(설사) 16.3%, 불면증 10.6%, 변비 8.3%, 입병 8.3%, 열 8.2%, 생리 불순 4.3%
- 스트레스 해소 방식 : 잠 32.8%, 친구들과 어울림(27.4%), 영화·TV·비디오·음악듣기(23.1%), 게임(19.5%), 그냥 참기(18.2%),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기(14.4%), 음식 많이 먹기(13.0%), 술 담배(9.8%), 운동(8.3%), 기타( 5.4%)
- (※ 참고)
- 요통 : 82.9%(늘 : 28.8%, 몇 개월째 : 15.2%, 오래 공부하는 날만 : 38.9%)
- 눈의 피로나 통증 : 89.6%(자주 : 38.0% + 가끔 : 51.7%), 10.4%(전혀 : 2.1% + 별로 : 8.3%)

▶ 생명보다 무거운 입시(성적) 중압감

- 15~24세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2위<sup>5)</sup>
- 초·중·고생 전체는 자살을 생각해 봤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42.9%), "자살하고 싶다(2.1%),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1.4%),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1.4%)고 하였고, 중3과 고1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2.4%), 기회만 있으면



3) 위와 동일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닷컴(www.nate.com)

5) 전체 인구의 경우 10만 명당 사망원인에서 자살(24.0명)이 암(131.8명), 뇌혈관질환(75.5명), 심장질환(35.6명), 당뇨병(25.0명)에 이어 5위.



자살하겠다(2.3%)고 답변

- 초·중·고·대학의 자살 동기를 묻는 질문에 1위(19.4%)가 성적 때문6)이라고 답변

(3) 폭력의 일상화, 아이들의 탈출구는?

▶ 입시교육, 또 하나의 '폭력'

- 대학을 위해 현재의 모든 삶을 희생하도록 교육
- 자신(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need) 부정을 정당화, 나 자신에게 부터 존중이 아닌 폭력을 일상화하도록 교육
- 이는 이후 삶의 현장-기업·학교-에서 반복 재생산됨. 자신과 타인의 기본요구를 부정하고 강요와 억압 등 폭력에 대한 내성, 허용성을 높여서, 폭력적인 구조나 제도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게 됨.

▶ 국영수 입시, 성적지상주의의 탈출구는 어디?

- 국영수 성적으로 한줄 세우기식 교육은 '서열 문화'를 유지, 강화함.
- 왜곡된 우월감과 열등감, 차별, 분노와 좌절 초래.
- 다양한 호기심과 욕구의 억압, 창의력과 탐구력, 개성의 말살
-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의 축소, 생활 기술 등 발달과제 성취에 장애
- 흡연(2003 고교생 흡연을 세계 최고) 음주 등 약물증가, 인터넷 혹은 성적 도피, 성폭력, 학교폭력 등 증가 : 자존감, 자신감 회복의 욕구를 약물로 회피하거나, 새로이 서열화된 권위체계(일진회, 폭력조직)의 형성을 통해 폭력적으로 충족 도모

(※ 참고)

- 뒤의 입시교육의 현황 참고
- 청소년 건강문제 중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우울 등 일부 통계

구분	실 태	출 처
학교 폭력 경험	-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초·중고 2117명 중, 학교가기가 무섭고 겁이 난 적이 있다 18.3%, 친구선배들이 때리거나 놀리는 게 무서워서 35.5%, 성적 21.9%, 선생님 15.3%, 기타 20.9% - 전국 140개 초·중고생(21,067명) 조사결과 ·남학생 폭력피해 경험 9.7%, 여학생 4.6% ·신체폭력 3.3%, 욕설·폭언 1.9%, 위협·협박 1.4%, 금품갈취 0.8% ·사용된 도구 : 손발 13.0%, 몽둥이 0.5%, 칼 등 흉기 0.3% ·장소 : 교실 47.9%, 건물 뒤 24.7%, 화장실 9.6%, 복도 8.8%	- 건강사회를위한 보건의교육연구회, 전교조 보건위원회 실태조사(2005.3)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인터넷 관련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초·중고 1500명 대상 - 나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 : 초등학생 7.6%, 중학생 13.1%, 고등학생 13.1%	한국통신문화재단(2004)
우울증과 자살	■ 부천시 중고생 2203명 무작위 추출 정신건강 실태조사 ▶ 중고생 3명 중 1명 우울 증상, 이 중 20%는 정신적 치료 필요 - 4명 중 1명은 최근 2주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낌 - 실제 자살을 시도함(남학생 3.3%, 여학생 7.3%)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조맹제 교수팀(1999)

6) '05.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교육연구회 실태조사, 1위 성적 때문에(19.4%), 2위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서(13.2%), 3위 가정형편이나 가족 관계 때문에(12.4%), 4위 친구 관계 때문에(11.5%), 5위 인터넷에서 자살에 대해 접하고 호기심(1.9%) 때문

3. 행복한 삶의 운동, 건강권은 모색으로 새로운 출발을!

(1) UN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 UN의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UN은 지난2002년 한국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입시교육이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중략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1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참고)

- 교육기본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 건강권, 행복한 삶의 운동이 되는 교육을!

① 건강권, 기본 생활주기 존중부터

- 모든 것에 우선하여 먹고, 자고, 쉬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주기와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업 일수와 수업시수 확보
- 아동·청소년의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해 밤 10시~아침 8시 사이에 일체의 학교수업과 학원 등에서의 사교육 제한
- 아동·청소년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와 학원에서 청소년의 저녁식사 시간의 의무화(최소 1시간 이상 확보), 학생들이 자주 찾는 각 식당에 청소년을 위한 건강 메뉴 설치
- 학교·학원에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소(작은) 프로그램(시력운동, 자연 돌아보기, 컵술질, 긴장 풀고 웃기, 허리 돌리기 등) 보급, 운동(헬스기구 등) 및 보건시설(hot pack, 기본응급처치 도구, 요양 공간 등) 확충, 접근성 확보
- 휴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한 공간부터 확대 - 교내 외 벤치, 멋스러운 차양, 화장실을 아늑한 공간으로 개선 등

② 청소년의 포괄적 건강권(정신, 정서, 사회적), 재능과 개성의 존중으로

▶ 청소년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화

- 청소년의 요구와 견해가 억압되지 않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아가 대안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활성화하도록 이끌어내야 함
- 이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 다양한 학생단체 결성 지원이 요구됨



- 교사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부(청), 지방자치단체, 국회, 국무총리와 대통령 등에 학생회, 학생단체 대표와의 협의회 법제화, 회의 자료와 집행계획, 평가서의 공개 의무화
- 학교의 권위주의적 교장제도 개선 및 학교자치구조 확보와 함께 추진하여 실효성 확보

▶ 획일적 교육과정의 개정

- 재능의 탐색과 발전,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교육과정 개정
- 국영수 등 주지과목 축소, 심화 학습과 선택과목 확대로 경쟁력 확보, 보건, 역사교육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교과는 집중 이수제 도입, 예체능은 함유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함.
- 강의와 교과위주의 타율적 교육과정운영에서 폭넓은 체험과 주도적 탐구로 운영

▶ 대학입시와 초중고 교육의 분리

- 교육은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29조처럼,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함
- 초중고 교육이 더 이상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 본고사 등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분리
- 이를 위해 줄 세우기 평가인 획일적인 백점 만점 평가 방식 폐지,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다양화.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

▶ 서열화가 아닌 21세기의 긍정적 경쟁력을!

-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경쟁을 탈피, 적자생존이 아닌 윈-윈(Win-Win)의 전략으로 가야 함.
-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재능과 적성에 맞게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은 발달과 재능 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고등교육에서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함.
- 조기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 전문대-산업체와 연계, 학벌 없이도 해당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부는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 혁신과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해야 할 것임

▣ 연간 수업 일수(국제비교) 및 수업 시수

	12세(중1)	13세(중2)	14세(중3)
오스트리아	1105	1073	1073
벨기에	987	987	자료 없음
덴마크	840	900	930
핀란드	730	912	912
프랑스	810	1026	1026
독일	930	960	960
그리스	918	918	945
아일랜드	935	935	935

이탈리아	1020	1020	1020
네덜란드	1067	1067	1067
뉴질랜드	979	875	900
노르웨이	805	833	833
포르투갈	949	949	949
스페인	900	900	900
스웨덴	828	828	828
터키	720	720	696
미국	자료없음	자료없음	980
국가평균	908	931	935
한국(국가평균과의 비율)	1254(138%)	1254(135%)	1254(134%)

출처 : 외국자료 OECD 교육지표, 1996

▣ 입시 위주 교육의 실질적인 중심 내용

문	항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기타
방송 수업에서 주로 하는 것은		47.8	21.2	8.3	10.2	5.5	12.5
보충 수업의 주된 교과는		39.3	44.5	11.8	2.4	1.1	2.0
특별 보충 수업의 주된 교과는		28.4	46.7	8.0	8.4	3.3	8.5
자율 학습 시간에 학생 자신이 주로 하는 것은?		23.5	58.8	4.8	4.6	5.3	8.2
대부분의 개인 공부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는 가		24.4	57.5	5.2	4.4	4.1	8.4
현재의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생들은 무얼 잘 해야 하는 가		23.1	55.6	11.2	4.1	1.8	6.0
학생 자신이 주로 하는 학원 수강 과목은?		24.2	68.2	3.7	2.0	0.3	1.8
학생이 주로하는 과외 과목은		26.2	67.9	1.8	1.1	0.4	2.0
학생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은		16.8	51.6	6.4	13.3	4.2	11.9
학생이 원하는 담임의 담당 과목은		39.3	44.5	11.8	2.4	1.1	2.0

▣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

문	항	고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교사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성적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급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이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25.0	75.0	31.9	68.1	47.7	52.3	58.8	41.5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 또는 부모나 형제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37.2	62.8	27.3	72.7	47.9	52.1	65.4	34.6
나의 진학이나 성적 문제로 부모님이 다툰다		35.8	64.2	28.8	71.2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담배를 핀 적이 있다.	9.4	90.6	12.9	87.1	42.6	57.4	59.0	41.0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를 한 적이 있다.	19.5	80.5	16.4	83.6	44.8	55.2	59.0	41.0
이성 교제를 통해서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28.2	71.8	23.6	76.4	39.0	61.0	48.3	51.7
음란물을 보게 되면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15.1	84.9	14.6	85.4	32.2	67.8	44.5	55.5
나는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	9.7	90.3	12.5	87.5	43.6	56.4	59.6	40.4
나는 음악/영화/비디오/텔레비전/전화/통신 등을 통하여 성적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84.3	15.7	80.2	19.8	72.9	27.1	62.3	37.7
나는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	55.8	44.2	73.8	26.2	41.6	58.4	67.3	32.7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기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39.8	60.2	15.7	84.3	-	-	-	-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기출한 적이 있다	4.5	95.5	6.5	93.5	68.3	31.7	65.3	34.7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31.3	68.8	31.6	68.4	-	-	-	-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자살을 기도해 본적이 있다	7.5	92.5	14.4	85.6	55.7	44.3	79.2	20.8
나는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40.9	59.1	34.9	65.1	65.4	34.6	82.0	18.0

출처 : 2000, 전교조 입시교육 실태조사

[3] 청소년의 쉼 권리-2

급식줄 서다보면 어느새 5교시, "좀 쉽다"  
점심시간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학교, 학생들은 너무 피곤해

“학교에서는 너무 쉼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소화도 되기 전에 끝이 나버리는 걸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점심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마포구 S여중 학생들은 점심시간 55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진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느라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고 전했다.

정경주(서울S여중1,가명)양은 “학교 점심시간은 총 55분이며 급식을 늦게 먹을 때이면 기다리는 데만 10분에서 15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점심을 먹기 시작하면 또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20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40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은 고작 20~30분밖에 되지 않는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되지 않아 이어지는 5교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졸거나 엎드려 잠을 청하고 있다.

동도중학교 학생들 역시 점심시간은 55분밖에 되질 않아 대부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점심시간을 더 줄이고 아침에 늦게 학교를 해 집에서 잠을 푹 더 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듯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쉼 시간이 없었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S여고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40분밖에 되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랑구의 S여고는 점심시간이 45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하나다슬(정신여고2)양은 "점심시간에 무언가를 하기에는 짧고 아무것도 안하기에는 긴 시간이 다"라고 밝히면서 "시간 길이가 문제이기 전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이어 김하나다슬양은 "가령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탁구장을 개방한다거나 뭔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늘어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충분한 휴식 없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복되지 못해

김지학 보건교사(소래고)는 점심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동감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소 자체가 작은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15분이나 20분 안에 식사를 빨리 마쳐야 해요. 1,2,3학년 모두가 식사를 하면 늦게 배식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없죠. 그 점에 있어서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급식 먹는 줄서기 경쟁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김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실을 찾은 학생들에게도 10분의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것도 지적했다. 제대로된 치료와 상담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다시 올 것을 권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지학 교사는 청소년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워했다. 그는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대체로 매우 부족하다. 대체로 오후 11시에서 1시에 자야 성장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2시가 넘어서야 잘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10시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씻고 수행평가를 하고 나면 평균 12시이고 등교 시간은 7시 40분이기 때문에 수면시간은 극히 짧을 수 밖에 없다. 그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충분한 휴식 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복이 되지 않아 쌓이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

### [4] 청소년의 막혀있는 표현의 자유-1

#### 전북 김제서고 급식불만 학생 퇴학처리 사건 '급식불만' 글 올리자, 3일만에 퇴학시켜

도 교육청에 급식불만을 제보한 학생을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적(퇴학)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 K고 1학년에 다니다 지난 15일 제적(퇴학)당한 이승철(가명)(16)군의 아버지(41)는 "아들이 인터넷에 학교 관련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며 "아들의 잘못도 있고 해서 선처를 요구하러 갔지만 학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퇴학을 시켜버렸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2일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대부분 친구들이 불만족할 정도로 형편 없다. 이는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13일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글을 삭제했다.



이후 15일 학교에 찾아온 이군의 삼촌과 이군에게 자퇴를 권유하면서 '학교 부적응'이란 사유로 쓰라고 하자 이군의 삼촌이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하였고, 이후에 부모님 면담도 하지 않은 채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려 이군을 퇴학시키고 일방적으로 22일 통보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려면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타난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씨는 "제적 통보를 받은 후 학교를 찾아가 '아들이 어린 마음에 저지른 일이니 퇴학만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한번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작은 사건을 가지고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학생을 일방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은 정말 가혹하다"고 분노했다.

**K고 학칙**

1조 73항 사이버를 이용한 학교장 교직원을 포함한 허위사실유포로 개인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19항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 처벌규정의 제적사항에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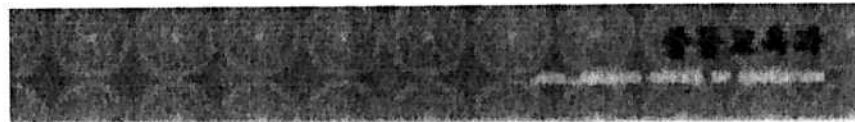
그는 또 "학교의 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항의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



면 소송을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은 현재 학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또한 징계를 받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K고 교감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교칙에 따른 분명한 제적 사유"라며 "보호자측이 자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발해 어쩔 수 없이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제적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군의 게시물을 확인, 통보받았다는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기억이 안나고 보고를 안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 문고답하기

본 게시판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북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설된 코너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답변없는 게시판입니다.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교육정책의견함"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고답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부당한 일로 신고할게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부당한 수업입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동의없이 학교장 마음대로 결정해 7교시 까지인 수업을 8교시 까지 하는 겁니다.  
공부할 하는 걸로 8교시를 하는 거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데  
숙제 연습을 하라고 8교시 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학교가 강제인지라 스물너스로 통학을 하는데 집에 도착하면 8시가 됩니다.  
다음은 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데 도시락회사에서 어제 기숙사에서 나온 똑같은 반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무슨 반찬이 나오면.. 다음주에도 똑같은 반찬이 나옵니다.  
다음주에 안 나오면 그 다음주에 같은 반찬이 나옵니다.  
다른 학교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똑같은 가격에 그런 음식이 나온다는 것은 학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걸로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런 소문도 있고요.. 급식소를 찾고 급식업체를 바꾼다는 말을 듣고 알아 보려고 했는데  
한기초 입학당시 했던말을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학교가 이런 거짓말로 입학생을 모으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오셔서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2일 이군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문고답하기란에 글을 올렸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군은 교육청 중등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급식이 같은 가격인데 우리학교 급식은 불만족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학교는 형편이 없는데, 이는 학교장이 뇌물을 받은 걸로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해 제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급식불만글 게시한 이군 "그 학교만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급식 관련 게시글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게 된 이군은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지만 그 학교만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학교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장에게도 불려가고, 교감에게도 불려가고 혼쫓이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며 "지금 추석 후에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은 "단순히 급식 불만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3일만에 퇴학시킨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하게 도 교육청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실장은 "교육청에 진상과악 요구와 전북K고에 행정계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학교에는 부모님의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3일만에 제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도 "도교육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에 징계조항에는 학부모 서명기회를 주게 되어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합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서 이군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



[최순영의원실 - 보도자료]전북 급식불만 학생 퇴학처리 교장 교육자인가?

법절차무시 퇴학시킨 교장 교육자인가?

학교급식문제 글 올린 학생 감정적 처벌에 교육청도 문제있다 복교 요구 최순영의원 "우리나라 학교의 수준이 이 정돈가, 교장 국감중인 요구할 것"

1. 전북 한 사립고 교장의 법절차 무시한 감정적 학생 퇴학조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김제서고 학생제적 사건 경위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문제 글을 올린 학생에 대한 3일만의 퇴학조치는 '초·중등교육법 3장 18조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동법시행령과 김제서고 학생생활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임이 드러났다.

2. 전북교육청 징계결정 원천무효 권고, 복교처리 명령 예정

전북교육청은 청소년 인터넷 언론인 바이러스의 보도(9월26일자)로 김제서고 학생의 퇴학조치가 논란이 되자 9월 27일 담당장학사를 보내 사안을 조사하고 다음날인 28일 학교에 선도위원회 결정을 원천 무효처리토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곧 제적학생 무조건 복교 조치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지시 불이행시 학교 감사 실시 후 관련규정 및 합법적 절차에 의거 사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3. 저질 급식이 사건의 원인, 학생 입막은 학교수준 보여준 사건

최순영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학교급식이 엉망인데 개선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은 급식비리 등 온갖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청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3일만에 퇴학처리를 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학생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10월6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 해당학교장을 불러 잘못을 따질 것"이라며 나아가 "교장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9월 30일(금)  
민주노동당 최순영

[4] 청소년의 막혀있는 표현의 자유-2

학생들의 말할 자유, 학교규정이 막고있다①  
학교규정, 학생들의 말할 권리를 막는다.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여기저기 글을 올릴수 있는 게시판이나 블로그가 늘어났지만 사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받아 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학교사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이 원가 학교나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때 학교는 그리 수용하는 입장에 서있지 못하다. 그중 가장 큰 제약을 만들어내는 것 중 하나는 학교규정이다.

학교생활규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는 조항이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의 사상검증을 하는 듯한 내용이 비껴있다. 현재 2005년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학교 규정만을 놓고 보면 7-80년대를 살고 있는 듯하다.

"학생은 교외에서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K고 징계기준이 담겨있는 64조에는 '학생은 교외에서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6일 이내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학교 밖에는 많은 학생자치 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기 위해선 일일이 학교장의 허락을 맡아야한다.

**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의는 \* \* \* \* \*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이거나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4조 (권리, 의무)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제 5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 할 수 없다.

▲학생들의 대표기구 학생회, 발언권이 제한되어있음은 마찬가지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S정산고의 학생회칙 규정 5조를 보면 '본 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에서도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학생회의 참여를 막고 있다. 따라서 축제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동아리지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학생들이 관여할 수 없다.

이보다 더한 것도 많다. 7-80년대를 연상시키는 규정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내용 없이, 불온·불손·불량·선동·주동 등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무엇이 불온한지, 불손한지에 대해서나 무엇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학교규정에서 학생들의 사상마저 검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고의 규정을 보면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나 가입한 학생,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정치관여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 "학생 신분(?)을 벗어나 불손한 언동"

초고에는 불온 문서 은닉·탐독·제작·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학생 신분을 벗어나 불손한 언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수업을 거부 또는 선동한 학생에게 징계를 하는 조항이 있다.

고에는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 행위를 한 학생, 각종 통신 등을 부과한 투서 등의 행위로 교사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을 징계에 처한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K고의 한 학생회장은 학생회연합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교장에게 물었지만 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했다. 한 학교의 동아리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동아리 실 보장, 동아리지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행사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5월 두발자유를 위한 집회와 내신등급제 반대를 위한 집회에서 징계를 우려하며 참여하지 못한 채, 집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의 8교시 수업 연장, 급식의 질'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훼손을 실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는 조항이 많은 학교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자가 무작위로 뽑은 10개 학교에 다 이런 내용의 조항이 담겨 있었다. 지난 5월 두발자유와 내신등급제 반대를 외쳤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작았다면 각 학교별로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교장의 동의없이 외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대목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학교규정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 [4] 청소년의 막혀있는 표현의 자유-3

#### 학생들의 말할 자유, 학교규정이 막고있다-② 정치활동, 학운위 참여, "안돼! 안돼!"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학교에서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 이는 최근 급식에 대한 불만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퇴학당한 사건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지만, 중·고등학교에 존재하는 '학칙'앞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말 한마디 멋멋하게 못하면서, '고개 숙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 인간은 정치적 동물... 그런데 왜 정치활동은 안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도 본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정치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회칙 가운데 하나로 '금지활동' 즉,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구정인 위원장은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거와 투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권 하향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현실과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구 위원장은 "꼭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행위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청소년기의 정치활동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노동당 전체당원 연령대 증가율을 살펴보면 청소년 당우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2위로 급증했다. 이는 정치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활동 금지'에 관해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학생 선도 규정'에 의거,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로 분류돼 퇴학처분의 사유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션스쿨의 종교자유, 예배선택권을 주장했던 강의석(20)군은 당시 학교 방송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것으로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했다.

강 군은 "당시 했던 행동이 학칙에 위반되고, 퇴학의 사유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나, 학교측은 학칙을 근거해서 퇴학을 주장했죠"라고 밝혔다.

### “학생의 주인은 학생인데, 학교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현재 학생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학생회 회원은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학생자치기구'답게 자율성을 갖고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에서 학생회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권리가 또 한 번 차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 김영삼(대신교)위원장은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미성숙하고 지도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관'을 문제로 꼬집었다. 학생들을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보다는 어른들의 지도와 통제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김 교사는 “입시'만을 부추기는 우리교육이 학생들 스스로 위축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입시에 빼앗겨서 다른 곳에 관심을 쏟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서려고 노력하는 학생의 노력에 비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임원출마도, 대의원의회의 소집도 학교장 허락 없이는 불가능

이외에도 학생회칙과 관련해 '임원구성'에 관한 조항에서도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들이 발견됐다. 서울 D고의 경우, 학생회 총칙 2장 제 8조에 “학생회 정. 부회장 후보자는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교사 6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역 내 학생권익을 보호하고 학생대변 단체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 출범식 사진

이러한 규정에 대해 구논회 의원은 <학생생활규정분석> 평가서에서 “품행 단정의 기준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며, 학생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은 어른들의 잣대에 맞추어 학생대표의 조건이 결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성적을 제한하는 것은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은 다른 일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교사의 추천서를 구비해야 하는 것도 “학생들의 투표를 거치기 전에 교사들이 자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 학생들의 투표가 가진 의미를 평가절하할 위험을 동반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학생회 임원은 전체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대표로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조건으로 능력을 가능하는 것은 투표를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서울 K고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까지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학교별로 날짜에 차이가 있을 뿐, 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고로 의사결정의 과정은 '회의'를 거쳐야 올바르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조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학교 측에서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교 안에서는 '학칙'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권리,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바이다.



[4] 청소년의 막혀있는 표현의 자유-4

학생들의 말할 자유, 학교규정이 막고있다-③

"그럼 학교 안에서 활동하게 해주든지"

학교에서 공부만 하기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청소년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가 끝난 후 학교 외의 다른 외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허락이 있는 단체여야 인정한다고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받고 외부활동이나 공연에 참여하라고 종용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교사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고 조서를 쓰거나 심한 경우는 체벌이나 징계를 받기도 한다.

- 8.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씨름에 가입하거나 잠적한 학생
-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10.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1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12. '사회봉사'를 명명했는데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사회봉사'를 명명하고 그래도 불응 시는 '특별교육이수'를 명명한다.

▲학생들의 대외행사 참여를 막고 있는 학교규정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열심히 갈고닦은 실력을 공연무대에 올라 뽐내고 싶어도 축제 외에는 기회를 잡기가 힘들다. 또 학교친구 외에 다른 친구도 사귀고, 다른 활동이 하고 싶어 어느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건 질책 뿐이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연미림 간사는 "예전에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강의석 군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학생회장으로써 종교자유를 얘기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외부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이 결정되었다"며 외부활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외에도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던 학생이 반장에 당선되었는데 그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일도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당해야 했던 일들을 성토했다.

하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징계한다"는 협박이다. 항상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용기있고 소신있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매달 2번씩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대작전'에 참가한 학교들도 만만치 않았다. 한 학교 댄스동아리는 동아리대작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불려가 죄인 취급을 당했고, 다른 학교도 "왜 허락없이 나갔느냐"며 모진 질책을 들어야 했다.



▲거리를 지나는 많은 명동시민이 2005 동아리 대작전에 큰 박수를 보냈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신기완

동아리지원센터의 홍창의 팀장은 "청소년들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학생들을 믿고 도와 준다고 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믿지 못한 채 공부에 방해될까 규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튀거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학생들. 즉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강한 통제와 압박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이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청소년들이 나서서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학칙에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주동, 동참한 학생'에게는 강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있었다.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이러한 학칙들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남아 있어 튀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돼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아직까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 청소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한 여학생은 "외부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배울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한다"라며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학칙이 있다.

대부분 학교들의 학칙을 살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다.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불량하다',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다' 등등 명확한 구분이 없어 학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고무줄 늘이기 같은 학칙이 얼마 전 전라북도 K고 학생이 교육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급식문제를 성토했던 일로 퇴학처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 번의 외부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교사에게 돌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야 하고, 외부단체에서 활동하려면 교장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으며 활동해야하는 지금의 현실.

연미림 간사는 학생과 교사가 주체로 함께 나서서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주체인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자문위원회로써 학생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바뀌 학칙을 개정한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한 몇몇 학교들을 모범으로 삼아 개선하려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신 권위적이고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교장, 교감, 교사들의 인식전환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홍창의 팀장은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잘 놀 줄 알아야 다른 것도 잘 할 줄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 활동이 연계되어 학교 안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이지만 현재 학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 써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의 욕구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학교의 통제로 청소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버렸다.

<출처-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http://1318virus.net>>